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6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2월 1일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광주·전남 통합 '서울시급 위상'… 국비 4년간 20조 지원

부단체장 4명 차관급 격상·공공기관 2차 이전 경쟁 때 유리한 고지
이 대통령 "통합 광역단체 출범 균형발전 계기…인센티브 최대 부여"

정부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확실한 성장 엔진을 장착해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를 바탕으로 '지역이 잘 돼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을 내세워 분권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안에는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위상·권한의 대폭 강화, 2차 이전대상 공공기관 우선 배정, 산업 활성화 등 4대 핵심 분야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광주·전남 통합이 실현될 경우 가칭 '광주전남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 동안 총 20조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재정 항목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정부 재원은 통합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복지 수준을 끌어올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이루는 종잣돈으로 쓰인다.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의 행정적 위상도 '서울시' 수준으로 승격된다. 현재 2명인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가 4명으로 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기획조정실장과 소방본부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특별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경쟁에서도 타 시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통합 지방정부를 최우선 고려 대상인 '0순위'로 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속도를 낸다.

통합 도시에 둥지를 트는 기업에는 고용 보조금과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찾아오는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센티브안이 통합을 선택한 시·도민들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약속"이라며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지방 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통합의 골든타임을 사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산업 배치 불균형과 전기요금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광주·전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논의되는 통합 움직임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광역단체의 출범이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자 국토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성사될 경우 재정과 권한 이양, 산업 배치,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尹, 체포방해 5년 선고 … 형량 납득 안 돼" ▶6면
건강 Q&A -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 ▶12면
안세영 인도오픈 우승 … 6연속 우승 ▶18면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수달가족의 외출 "햇볕이 좋아요" 17일 나주시 대호수변공원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일가족 3마리가 따뜻한 햇볕을 쬐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수달은 수질이 깨끗하고 먹이가 풍부한 하천·호수·습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표종(Indicator Species)'으로 분류하는 대표적 종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순천대 재투표서 목포대와 통합 찬성…의대 설립 청신호

학생 2차 투표서 찬성 50.34%

순천대 학생들이 재투표를 거쳐 목포대와의 통폐합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의 전제 조건이자 지역 대학 생존을 위한 '1도 1국립대' 설립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 차례 부결 사태를 겪으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내부 구성원 동의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

18일 순천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목포대와의 통합 찬반 재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학생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표시해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전체 재학생 유권자 6328명 중 49.42%인 3127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50.34%(1574명), 반대 49.66%(1553표)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학생 투표 가결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양 대학의 통합 논의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의대 설립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고 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및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통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캠퍼스 간 기능 재배치와 유사 학과 통·폐합, 교명 변경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구성원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순천대는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대와 함께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순천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학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통합 과정에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양 대학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의원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관련기사 4면〉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는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원내대표를 맡았던 때 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며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사직 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필두로 다수의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